

시론



임 우 진
민선 6기 광주서구청장

세계 4위의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광주과기원에서 뚜렷한 명분도 없는 총장 퇴출시도로 법적 다툼이 돼 지난 5개월간 학교행정이 마비되고 학교개혁 중단, 예산과 발전동력 좌절, 국가·지역의 연구개발 혁신기능 약화 등 많은 손실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광주과기원 사태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리더의 폭주에 대해, 적절히 대처 못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한없는 자괴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최근 과기부 감사결과, 총장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한데다 이사장이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는지 사표를 제출하고, 감사가 새로 선임되는 등 다소 변화의 조짐이 있어, 그간의 경과를 교훈으로 삼고자 필자의 생각을 적어본다. 과기원 사태가 단지 과기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똑 같은 문제가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과기원 사태를 요약하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총장 흡입계에서 시작된 노사갈등이, 이사장의 총장 물어내기로 번질때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 등을 유발하고, 결국 이사장이 스스로 사퇴하게 된 사태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기관에나 있을 수 있는 노사갈등을 원만히 풀어가지 못하고 막다른 골짜기 불고 가서 피해를 키웠다

기고



안 영 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회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

국회는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은 있으나, 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금 예산사업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없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소위원회 및 감사반의 의결이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요구는 각 국회의원실이나 보좌관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다·중복자료 요구가 많아지고 지방고유 자치사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 뿌리를 둔 중앙정부의 감사는 물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도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 불합리한 자료요구로 인해 국정감사기간 밤을 새는 공무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국가재난상황인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지방정부의 현안과 겹쳐 지방공무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어 대민서비스와 행정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과잉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공무원들도 가중된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정책 의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사장(이사회)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과도한 밀어붙이기 때문이지만,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학교의 역량과 내부시스템,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한 지역사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특히 사태를 주도한 이사장은 어떤 근거로 일찍부터 총장퇴출을 위한 무리한 물어내기에 집착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세계에 자랑하는 광주 과기원과 민주도시 광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뭐가 두려워 모든 체 침묵하고 있었는가?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사태의 발단, 전개, 대응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발단과 진행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이성적이라는 점이다. 1)타 과기원은 1명도 없는 노조의 인사위원 증원요구(3→5명)와 총장 비리의혹 제기 등 무리한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나 사실조사 한번 없이 곧바로 총장사퇴를 종용했다. 2)총장의 사의 없음을 직 접 수차례 확인하고서도 총장 사의 수용이라는 기성천의외 의결을 했다. 3)총장의 법적 대응에 따라 법원이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자, 이사장은 법원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직에 복귀한 총장에게 곧바로 사표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없음을 통해 사표제출 거부 등 사유로 해임결의를 했다. 즉 총장퇴출만을 향해 막장으로 내달은 것이다. 과연 뭘 믿고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질주했는지 밝혀야 할 일

이다.

둘째, 학교가 비이성적 폭주를 제어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사장의 폭주를 뒷받침한 것이 이사회다. 두차례의 총장해임 이사회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사회가 총장사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사표도 없고 구체적 표시도 없는 사의를 어떻게 수용했다는 말인다.

여기에서 총장사의 수용의결이 법원에서 일단 잘못됐다고 결정됐는데 여기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노사갈등 상황 속에서의 일부 대화만 발췌해 신뢰상실, 리더십 부재라고 하고, 막연히 불신임하니까 사표를 내라고 하고 내내 나가 해임한다는 해임의결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공감했는가. 이사장이라고 언제든지 총장에게 사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사들은 모두 인격과 덕망있는 각계의 리더들이겠지만 지난 두 차례 이사회의 실제적 절차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다. 무리한 의결을 이사장이 주도했다고 해도 이사장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 이사들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학교가 잘못 가고 있는 동안 감사,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동문회, 발전재단 등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교정에 대자보 하나, 의사를 표현한 플래카드 한 장 사들이 없음을 통해 사표제출 거부 등 사유로 해임결의를 했다. 즉 총장퇴출만을 향해 막장으로 내달은 것이다. 과연 뭘 믿고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질주했는지 밝혀야 할 일

셋째, 지역사회는 철저하게 수수

방관하였다는 점이다. 과기원은 5·18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광주에 입지해 국가적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과기원 사태에 대해 과연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도, 선거 때마다 지지가 보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무 관심이 없다. 지역의 언론은 심층보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가? 시민사회는 투명성기구에서 성명한 번 발표한 외에 누가 관심을 가졌는가. 한마디로 수수방관 그 자체다. 지역사회 한복판에서 무법자적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할 일인가. 광주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광주과기원 사태는 무책임한 요구와 정보로 불신과 갈등을 유발시켜 이익과 세력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휘둘러 상황을 오만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사건이다.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컨트롤해야 할 지역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빚어낸 비극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단지 과기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일당 독점지배의 장기화로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지역정치 담론은 사라지고, 권력경쟁을 위한 세력화 경쟁으로 지역을 분열·황폐화시키는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질 낮은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동네 주민자치까지도 작은 정치판이 되어 갈등을 빚고 있지 않는가? 선한 다수가 침묵한다면 결코 악한 소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요원한 일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방고유사무 국감은 ‘국회갑질’ 구태정치 중단돼야

역할도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시대에 맞게 국정감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21세기 첨단 정보기술이 세계의 공간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과다·중복된 자료요구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자료요구는 감사대상으로 한정하고, 확보된 자료는 현재 국회가 구축하여 운영 중인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상호 공유해야 한다.

◇지자체 국정감사를 격년제로 =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격년제로 바꾸어 국정감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 고용안정 =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의 운동장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능력

을 보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여러 보좌관들은 “보좌관들의 평가는 국감에서 나온다. 보좌관들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 때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보좌관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이유로 국감이 끝나면 많은 보좌관들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다”고 하소연을 한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니 성과를 보이기 위해 상호 공유 없이 자료요구 공세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다 성숙된 국감을 위해서라도 보좌관들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고유사무의 국정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에 대해 ‘국회법’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여 잘못된 관행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갑질’이며 ‘잘못된 관행’이므로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불법주정차 근절하자

최근 한 가구당 소유 차량 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주차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초래하고 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회전 구간 등에 주정차된 차량은 통행을 막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갓길 또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아 직 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사망사고의 원

인까지 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 차량이 아닌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만 내고 형사처벌은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소방과 경찰의 긴급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 진입을 막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갑자기 차량들이 사이로 튀어 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이에 대응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되는 등 개정을 강화하였다.

5월1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

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주정차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들은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금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조급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정성식·전남경찰청 27기통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비 10조 돌파 광주·전남 안주해선 안돼

광주시의 2022년도 현안사업 국비가 3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7조5천억원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는 미래 먹거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재정당국을 집중 방문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다.

광주는 모두 3조1천4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819억원(13.8%)이 증액됐다.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전남은 7조5천131억원에 달하며, 300여억원이 늘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 EV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등 건의한 중점사업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낸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안주할 시간이 없다. 정부예산안이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나서야 하는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데, 반드시 값진 결실을 맺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국가고자기장연구소 및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전남의 경우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니 기대가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며 역할을 해내야 한다.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래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높일 때다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신규 확진자 중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를 통해서만 현재 누적 90명대에 이른다. 지난달 31일 하루에는 광주 전체 37명 가운데 외국인이 15명을 차지하기도 했다. 국적별로는 2명은 한국이며 13명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다. 광주시는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광산구 주거지, 공단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단 검사를 독려해왔다.

전남지역도 외국인 확진자는 7월 이후 100명이 신규 발생해 155명으로 급증한 반면, 백신 접종률은 35%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빨간 불이 켜졌다. 방역당국은 선제적 백신 접종에 나서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18·49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예약을 접수한다. 광산구는 자체적으로 1회로 끝나는 안센 백신을 활용, 건강보험가입과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문지마 접종을 진행 중이

다. 다만, 단순 여행이 아닌 90일 이상 체류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남도 또한 안전 백신을 적극 활용해 단기간에 접종을 마치도록 지원하며, 시군 보건소에서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대리인 예약도 받는다. 또 미등록 외국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 단속 및 강제퇴거 사례도 없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 변이발 확산세가 심각하다. 광주·전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제반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접종을 더욱 늘려야 한다. 속도를 높여야 할 때인 것이다.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증상 의심 시 검사를 기본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조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남 의대 유치’ 코로나로 반동해야

취재수첩



임 후 성
(정치부 기자)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중이다. 관련 논의가 멈춰선 것이 다름 아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때문이라는 점이 아이러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도내 중증환자 치료 시설이 없어, 중증 환자 23명 중 16명이 타 시·도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남도민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연간 80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유출 비용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내용이 본보를 포함한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알려지게 됐다.

전남도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고 정부 역시 공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23일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가 사실상 확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고 관련 논의를 의정협의체에서 진행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안정 때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던 올해 2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재개를 제안했지만 의정 합의의 앞세운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가 급선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논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져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오는 11월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남도도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비해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 짓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의과대학 유치의 문턱이 코로나19로 현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의과대학 논의가 코로나19로 멈춰설 게 아니라, 선결 과제를 촉구했고 정부 역시 공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23일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90	정 치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 진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설 실 650-2006	기 획 사 업 국 650-2079	편집국 650-2019	
	문제부 650-2065	T V 본 부 650-2009	입 무 국 650-2020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